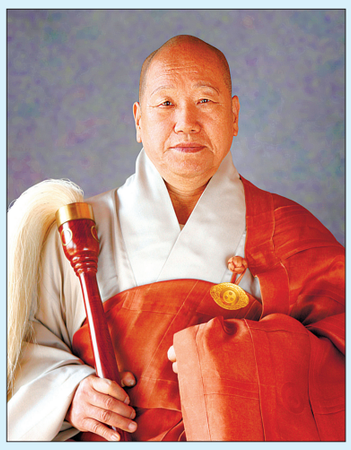
“용서 · 화합으로 국난 극복하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4월 28일 교시 내려

코로나19 확산 관련 첫 교시
‘코로나19 극복’ 메시지 담아
“희생된 세계인 왕생극락을”
“코로나 소멸로 평화 성취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법계가 서로 연기돼 있기에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용서와 화합으로 이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합시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교시를 4월 28일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 관련해 진제 스님이 교시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제 스님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대독한 교시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웃이 본래 부처님이 될 사람들이다.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유마의 비원과 지장의 본원이 절실할 때”라면서 “우리 국민들은 인류와 함께 백절불굴의 신념과 사즉생 진리로 지구상에 코로나 질병이 영원히 소멸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제 스님은 올해 연등회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스님은 “경자년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음력 4월 8일~윤달 4월 8일(4월 30일~5월 30일) 방방곡곡 모든 사찰에서 코로나 질병소멸과 유명을 달리한 우리 국민과 세계인을 위해 왕생극락을 천도한다”면서 “윤 4월 8일은 국민과 불자들이 연등에 불을 밝혀 대광명이 우주법계에 충만해 코로나 질병이 소멸돼 세계평화를 성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목과 대립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대통합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진제 스님은 그간 조계종 총무원의 선제적 대응을 치하하고 앞으로도 시대적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진제 스님은 “전대미문의 감염병 창궐에 대처함에 있어 종단 행정 수반인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세계 어느 종교 지도자보다 수승한 지혜와 높은 식견, 지도력으로 세계인류의 생명을 구제했으니 높이 치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불교는 지금도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사찰 템플스테이에서 휴식공간과 공양을 제공하고 안심입명을 얻도록 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부대중은 신명을 다 바쳐 불조의 소명과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종정 진제 스님의 교시 발표에는 교육원장 진우 · 총무부장 금곡 · 기획실장 삼혜 · 재무부장 탄하 · 문화부장 오심 · 사회부장 덕조 · 호법부장 성효 · 사업부장 주혜 스님 등 총무원 집행부 스님들이 배석했다.

태고종, 편백운 스님 등 ‘비대면’ 최종심리

호법원, 4월 28일 종단 최초
항소 여부 · 당사자 진술 확인
논란 사전 차단 방안은 ‘호평’

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장 호명)이 불신임된 전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등 징계대상자를 대상으로 ‘화상심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화상심리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 온 편백운 스님 등 전 집행부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확정 짓는 최종심리로, 코로나19 사태에도 당사자 소명권을 ‘비대면’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징계 절차를 원칙에 따라 마무리 짓는 동시에, 당사자 심리를 통해 징계 이후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했다는 평가다.

태고종 호법원(호법원장 지현)은 4월 28일 편백운 스님 등 14인의 초심원 징계에 대한 최종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심리는 호법원장 지현, 호법부원장 관정 스님을 비롯한 호법위원 스님들이 서울 총무원 청사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가운데, 각 징계당사자와의 ‘화상통화’를 통해 변론과 최후진술을 듣는 등 출석에 갈음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호법원에 따르면 태고종 초심원은 지난해 9월19일 편백운 스님 등 9명에 대해 ‘멸빈’을, 5명 스님에 대해 ‘제적’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징계대상자들은 종단 절차에 따라 호법원에 편백운 스님을 대표로 공동항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호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징계대상자 3명이 사실확인서를 통해 ‘항소하지 않았다’는 의사를 밝혀오는 등 일부 징계대상자들의 항소여부가 불명확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호법원은 이날 ‘화상심리’에서 전수조사를 진행, 각 징계당사자들의 항소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실제 항소를 제기한 징계자에 대해서는 최후진술을 받거나 불출석 확인으로 심리를 종결했다.

그 결과 징계대상자 가운데 ‘항소하지 않았다’고 소명한 5인에 대해서는 초심원 판결 그대로 확정됐으며, 항소한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는 화상통화로 소명권을 부여하고 전화에 불응한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는 불출석으로 심리를 종결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코로나19 희생자 추모 위해 종교인들 모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사망자를 추모하고 위령재를 봉행하기 위해 6대 교단 지도자들이 모였다. 각 종교 지도자들은 사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코로나 19 종식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았다.

BCRP 부산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정산)는 4월 29일 송상현 광장 부산연등문화제 특설무대에서 ‘코로나 19 종식과 희생자를 위한 합동 위령재’를 개최했다.

각 종단 대표들은 전 세계에 있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묵념했으며 이어 추모사를 전하며 사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위로했다. 각 교단 대표들과 내빈들은 헌화하고 교단에서 진행하는 추도식으로 위로를 더했다.

합동 위령재에는 부산종교인평화회의 고문 정각 스님, 부산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정산 스님, 박동신 공동회장(대한 성공회 부산울산 교구장), 박차귀 공동회장(천도교 전국여성회 본부 회장), 조동성 신부(부산 카톨릭대학교 상임이사), 김덕수 교무(원불교 서면지구장), 황석민 목사(부산지장경찰청 교회 담임목사)와 하정선 불교TV염불공양모임 회장 및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강남 서래원 개원, 불교문화 전파 발원

4월 29일 봉은사서 개최
사천왕상 점안식도 함께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등 조계종 관계자들이 서래원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 사찰과 불교문화를 알리는 공간이 탄생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4월 29일 봉은사 진여문 앞에서 전문불교문화 체험공간인 서래원을 개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김상훈 봉은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불교용품점과 대중공양처 삼소, 빵집과 꽃집 등으로 구성된 서래원은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로 2019년 3월 착공했다.

봉은사는 직장인과 외국인들의 왕래가 잦아 그동안 사찰문화를 전하는데 노력해왔다. 서래원은 봉은사에서 대중들이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서래원에서는 염주와 불서 등 불자들을 위한 불교용품 뿐만 아니라 꽃과 사찰국수, 빵 등을 판매한다. 봉은사의 조포사 전통에 따른 친환경 두부 등도 홍보차원에서 판매된다.

이날 개원식에 참여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봉은사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현재 수도권 남부의 불자들의 중심 귀의처”라며 “서래원은 아미타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봉은사에는 그동안 불교를 지키기 위해 위법망구하신 허응당 보우 스님을 비롯해 봉은사 철폐를 목숨걸고 막은 백곡 처능 스님 등이 있다. 봉은사가 현재 백곡 처능 스님의 부도탑과 비 건립도 발원했기에 이에 대한 관심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주지 원명 스님은 “함께 점안한 사천왕상을 비롯해 봉은사는 물론 불교 외호에도 큰 힘을 발휘 할 것”이라며 “불사에 참여해주신 봉은사 대중들과 신도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봉은사는 이날 서래원 개원에 앞서 사천왕상 점안식도 개최했다. 봉은사의 사천왕상 점안식은 서울시유형문화재 제160호인 기존 사천왕상이 보호각 부식 등의 문제로 대웅전으로 옮겨진 후 새 사천왕상을 조성한데 따른 것이다.

봉은사 사천왕상은 한봉석 불국조각원 대표가 조성했고, 진여문 바깥쪽으로 강화유리 보호각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사천왕상을 친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천왕상 복장에는 봉은사 판전의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 목판인경본과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강조한 백곡 처능 스님에 관한 책 등이 함께 봉안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선학원 · 조계종, ‘분한신고’ 두고 갈등

선학원, “가등록 압박수단” 주장
조계종, “재적승 기본절차일 뿐”

현재 진행 중인 조계종 승려 정기분한신고와 관련, (재)선학원과 조계종 간 극명한 입장차에 선학원 소속 사찰 도제 스님들의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조계종 승려분한신고는 10년 주기로 모든 재적승이 조계종 승적을 유지하기 위해 거쳐야 할 기본 절차임에도, (재)선학원이 각 분원에 공문을 발송해 ‘조계종이 가등록(이중등록)을 요구하는 수단’이라며 분한신고에 대한 부정적인 안내 사항을 공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선학원(이사장 법진)은 3월11일 전국 분원장 스님을 대상으로 법진 이사장 명의의 ‘조계종 승려 정기분한신고 및 이중등록’에 관한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선학원은 해당 공문을 통해 조계종 승려 정기분한신고 시행과 관련 “재단 소속 스님들이 승려분한신고를 하려고 하면 유언장 작성과 분원(사찰) 가등록을 조계종측이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며 “선학원 기본재산을 조계종에 가등록(이중등록)할 경우 차후 조계종의 분담금 납부요구와 임명권, 재산권에 관한 권리행사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선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상임위원장 금곡)’는 4월 13일 안내공문을 재차 발송해 사실을 바로잡고 “정기분한신고는 분담금 납부요구 및 임명권, 재산권에 관한 권리행사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신고 기간이 촉박한 상황인데다 양측의 입장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서, 분원 소속 스님 및 선학원 도제 스님 사이에서는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호소가 적지 않다.

심각한 문제는 스님들이 선학원 공문을 보고 분한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려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승적이 말소돼 조계종 승려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이다. 조계종 승적을 상실할 경우 교육, 수행, 승려복지를 비롯한 종도로서의 모든 권리가 제한된다.

따라서 조계종과 선학원 간의 묵은 갈등에 스님들의 고충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선학원은 해당공문에서 “재단이 분원 소속 스님들에게 선학원 승적과 승려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재단 소속 많은 스님들이 재단 승적과 승려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게재하는 등 사실상 재단법인 선학원의 승적 발급을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송지희 기자

